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日 의존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문 대통령,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모두발언서

“부품·소재산업 육성 위해 예산·세제 등 총동원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배제 못해... 모든 가능성 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과 함께 단기 대책과 근본적 처방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간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 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격정하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뉴시스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국토위 소위 통과

카풀 2시간씩 허용... ‘택시월급제’도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시 2시간씩으로 시간을 한정하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부를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화협약이 합의된 이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화협약은 지난 3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로 처우 개선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뉴시스

전북도선관위, 여성 정치참여 연수 진행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글로벌 여성 리더십 수강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성의 주권인식을 함양하고 정치적 관심을 제고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민주시민 교육 과정으로 총 2회로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분권과 협력으로 만드는 지방자치’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정부혁신 특강 등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 논의

‘분권과 협력으로 만드는 더 좋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10일 전국 70여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부터



1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재민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예산과정’ ▲전북현대모터스 FC 백승권 단장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정당과 선수(選數), 지역의 단체장이 골고루 참여함에 따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단체장들이 민선 7기 2년 차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단체의 성공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의회 평화통일실현·자치분권연구회 DMZ 견학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평화통일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연구대표 문승우 의원, 군산4)는 9일과 10일 이틀간 강원도 DMZ일대 현장견학에 나섰다. /김진성 기자

연구회 회원들은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관, 6·25 전쟁체험 전시관, DMZ 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북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탐구했다.

또한 평화와 안보의 현주소를 생생하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길 체험을 진행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그동안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대결지대이자 중무장한 지역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했던 곳으로 관문점선언을 계기로 평화로매길을 조성해 DMZ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대표 문승우 의원은 “최근 남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움츠러들었던 남북교류가 재논의 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에 통일교육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통일관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탕 전주